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21.(목)

[보건복지부 2023년 정책 성과 및 2024년 돋보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부부와 동행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시·도 관계자 회의 통해 확정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0,081명, 2023년(1~10월) 114,801명으로, 연말기준으로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술간 칸막이 폐지와 시술횟수 확대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에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 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몇 년 후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아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서기관	최 환 (044-202-3395)



<붙임 1> 난임 지원 관련 시·도 간담회 개요

<붙임 2>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난임시술비 지원

□ **개요**

- (목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저고위, '23.3월) 및 '생애주기 여성건강증진 지원방안'(당정협의, '23.12월) 주요 안건인 난임지원 확대를 위한 복지부-시·도 간담회 추진
 -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中 "난임지원 확대"
 - ** 생애주기 여성건강증진 지원방안 : ① 난임시술 지원 강화
- (일시·장소) '23. 12. 21.(수) 08:00 / 보건복지부(시·도 영상연결)
 - ※ 인터넷망 온-나라 PC 영상회의
- (참석자)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장 (시·도) 17개 시·도 담당 국장
- (주요내용) 시·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24년도 난임극복 사업 정책 방향* 등 공유
 - * ▶소득기준 폐지 진행 현황, ▶난임 건보 시술지원 확대, ▶난임·임신·출산정책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8:00 ~ 08:05	(5')	참석자 소개 및 모두 발언	복지부 제1차관
08:05 ~ 08:10	(5')	'24년 난임지원 정책 추진 방향	복지부 출산정책과장
08:10 ~ 09:21	(71')	시·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24년도 사업계획 등 공유 및 의견수렴 * 시·도별 발언(各 3'), 질의응답(20')	각 시·도 국장
09:21 ~ 09:25	(4')	마무리 발언	복지부 제1차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3.7.27.)

<p>저출산 현황</p> <p>출생아 수 24.9만명 합계출산율 0.78명</p>	<p>난임시술 신생아</p> <p>2.3만명 (총 출생아의 9.3%)</p>	<p>쌍둥이 이상 다둥이</p> <p>1.4만명 (총 출생아의 5.4%)</p>
--	---	---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
지금은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다둥이 일괄 140
앞으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만원씩 증액

2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지금은	1명, 5~20일	2명, 10~20일	2명, 10~20일
앞으로는	1명, 5~20일	최대 2명, 10~20일	태아 수에 맞춰 최장 40일

3 난임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지금은

(8개 시도) 중위소득 180% 적용
(9개 시도) 소득 수준 무관 지원

앞으로는

'24년부터 8개 시도 소득기준 폐지 전국 어디서나 소득수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

4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등),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100만원, 2회)

5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년 4개월
앞으로는	소득기준 철폐('24년)	2년('24년), 예외기간 인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24.2월 예정)

현행			개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체계		보편적 지원 - 건강보험		보충적 지원 - 시술비 지원사업			
		횟수	회당 건강보험부담액		횟수	회당 예산 지원액(상한)*	
(예시: 난임시술 평균 급여 비용)			45세 미만 (70% 건보부담)	45세 이상 (50% 건보부담)		45세 미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300만원)	16회	210만원	150만원	16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120만원)		83만원	61만원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60만원)		5회	42만원	29만원	5회	30만원	20만원

*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약제, 배아 동결 비용) 지원
 ** '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2인가구 622만원, 3인가구 798만원